

Executive Summary

□ 韓·美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자금 중개 기능 왜곡 심화 가능성과 대책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1차 본 협상이 2006년 6월 5일 시작되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 규제(원칙적 허용, 일부 금지) 전환, 법인과 지점 등의 설치 의무(상업적 주재)가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협상 대상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新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금융 산업은 대폭적인 금융 규제 완화와 폐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내외 업체들의 무한 경쟁 환경이 도래하고 미국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에 따르는 소비자 편익 증대, 동북아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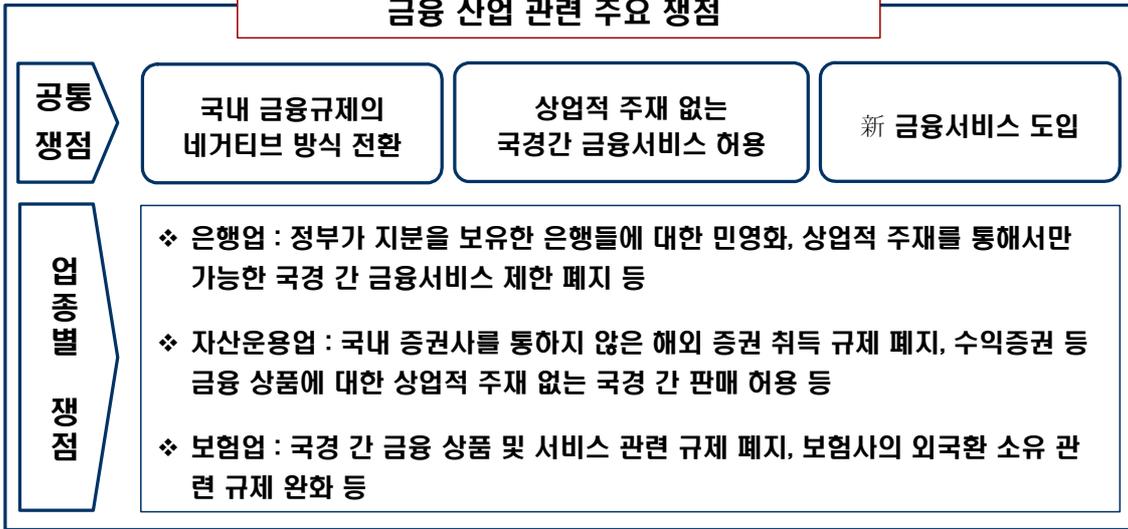
그러나 국내 금융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첫째, 자금 중개 기능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기업 신용 평가 체제가 취약해 주식, 회사채 등에 대한 적절한 가격 형성이 미흡하여 기업들이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대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은행들의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기업 부문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소매 부문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로 금융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자본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 금융 보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 등 소매 금융에 더욱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막아 투자 정체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에 비해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산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은 국내 금융 회사들에 비해 자산 규모, 자본 조달 비용, 상품 설계 능력, 시장 인지도 등에서 경쟁력이 우월하다. 특히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인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업종 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금융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회사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국내 금융 회사들의 부실화가 심화될 것이다. 셋째, 국부 유출이 증대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투자, 고용 등을 수반하지 않는 미국 금융 회사의 한국 시장 잠식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한미 FTA 체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회사의 적대적 M&A 증가도 예상된다. 멕시코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인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30.9%에서 2003년말 83%로 급증하였으며, 2003년말 현재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의 은행은 Banorte 은행이 유일한 상황이다. 넷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증대될 우려가 커진다. 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운용 손실 등과 같은 분쟁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앞서 신용평가체제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금융 여건을 확충하여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을 국내 기업 금융 시장으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총제·금산법과 같은 기업 규제의 폐지를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 회사들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대내외 금융 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시급하다. 한편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에 따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 관리 기능 및 금융 감독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韓 美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자금 중개 기능 왜곡 가능성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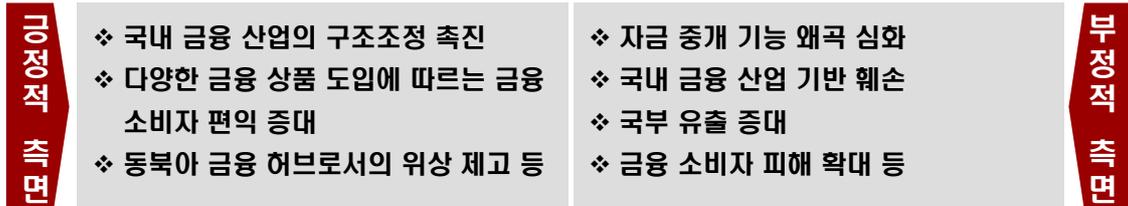
2006년 6월 5일 한미 FTA 1차 본 협상 개시

금융 산업 관련 주요 쟁점



한미 FTA 체결에 따르는
파급 효과

한미 FTA 체결은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신용평가 체제 낙후와 같은 기업 금융 발전 여건의 미흡 등으로 자금 중개 기능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존재



정책 과제

- 선진화 된 기업신용평가회사(CB) 육성 등을 통해 기업 금융 시장의 상품(주식, 회사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촉진하여 외국 금융 회사들을 기업 금융 시장으로 유도
- 출중제, 금산법 등의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 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대내외 금융 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 마련
- 금융 상품 리스크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확충하여 금융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 韓·美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 자금 중개 기능 왜곡 가능성과 대책

1. 한미 FTA 추진 현황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 (현황) 국내 금융 규제에 대폭적인 완화 및 폐지를 포함하는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지난 2006년 2월 시작되어 2007년 6월말 까지 진행될 예정임
- 추진 일정 : 2006년 2월 3일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선언된 한미 FTA협상은 6월 5일 1차 본 협상에 돌입하고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는 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임

< 한미 FTA 향후 추진 일정 >



자료 : 외교통상부.

- 금융 산업 관련 예상 쟁점 : 국내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일부 금지)으로 전환, 상업적 주재¹⁾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新금융서비스²⁾ 개방 등이 한미 FTA의 금융 산업 관련 주요 쟁점으로 예상됨
 - (은행업)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민영화,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제한 폐지 등이 예상 쟁점임
 - (자산운용업)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해외 증권 취득 규제 폐지(현재 재정부 장관 승인 필요),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판매 허용 등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보험업) 국경 간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제 폐지, 보험사의 외국환 소유 관련 규제(총자산의 30%이내)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개방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됨

1)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상대국에 법인 및 사무소 설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면, 해외 금융회사들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新금융서비스란 자국(한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고 FTA 협상 대상국(미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국(한국)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특히 이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출시되는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음.

< 한미 FTA 관련 금융 산업의 예상 쟁점 사항 >

분야	예상 쟁점 사항
금융 산업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및 금융상품의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경 요구 ● 금융서비스 국경 간 거래 허용 (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 ● 新금융서비스 허용 등
은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민영화 추진 촉구 ● 외국은행지점신설에 대한 감독 차별 폐지 ● 외국금융기관의 자산 국내 보유 조항 폐지 ● 외국은행지점 대표자의 자격기준 완화 ● 기업과 금융기관 간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규제 폐지 등
자산운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증권 취득 제한 철폐 ● 외국투자자의 증권거래 제한 철폐 ● 외국 수익증권의 판매대행 의무 폐지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보업,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 대리/중개업 등의 국경 간 공급 허용 ● 한국 보험사와 제휴 및 보험 전문가 고용제고 방안 ● 유사보험기관에도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감독법(보험업법) 적용 ●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에 대한 완전 자유화 ●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외국계연금사업자의 접근 허용 ●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자산 보유의무 폐지 ● 서울보증보험의 주택보증보험 독점 폐지 등

자료 : 서윤석,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금융 산업의 영향 분석', 『손해보험 5월호』, 2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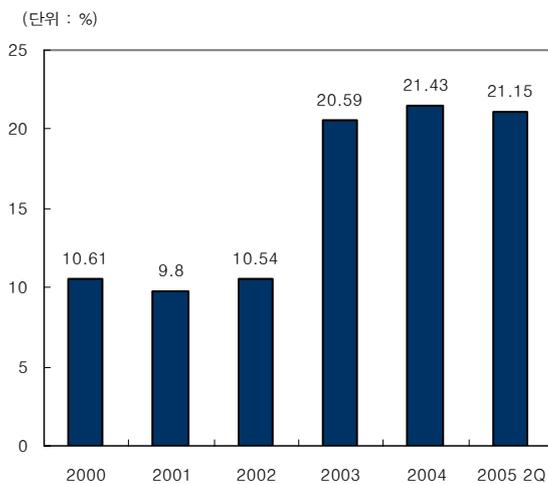
2. 국내 금융 산업에의 파급 효과

-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금융 산업은 대폭적인 금융 규제 완화 및 폐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내외 업체들의 무한 경쟁 환경 도래 및 미국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국내 금융시장 개방 이후 나타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체결은 국내 금융 산업에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됨
- (금융 산업 공통)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다양한 금융 상품 도입에 따르는 소비자 편익 증대, 동북아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자금 중개 기능 왜곡 심화, 국내 금융 산업 기반 훼손, 국부 유출,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부정적 효과도 예상됨

① 긍정적 효과

-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 금융 회사들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금융 회사들이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외환위기 이후 개방화가 진전된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된 경험이 있음
 - 예컨대 외국자본 유입으로 구조조정이 촉진된 은행권의 경우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수가 1997년 26개에서 2004년에는 14개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은행권 평균 자산이 1997년 16조원에서 2004년에는 51조 원으로 세배 이상 증가해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며, 자기자본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³⁾와 BIS 비율도 증가해 수익성과 건전성도 크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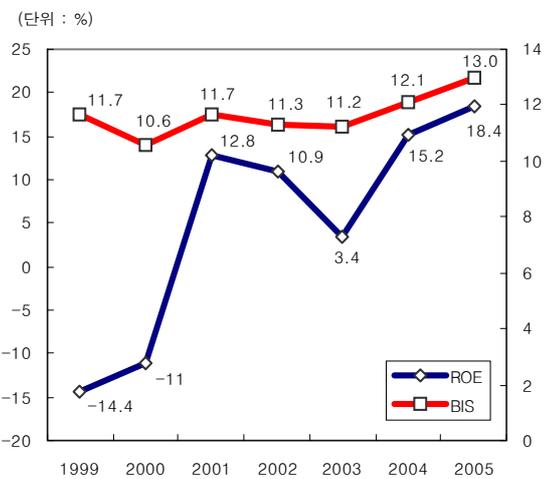
<외국 자본의 은행업 시장점유율 >



자료 : 금감원.

주 : 총자산 기준임.

<은행권 수익성 및 건전성 >



자료 : 금감원.

-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 : 국내 금융 소비자들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등 선진 금융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폭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됨

3) 자기자본이익률 (ROE : Return on equity) : 기업이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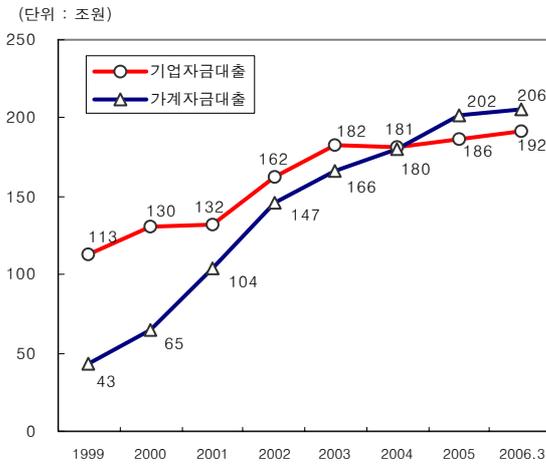
- 국내 금융 상품은 그동안 철저한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운영되어 업종 간 경계가 철저해 다양한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음
 - 반면 미국의 경우는 원유, 금 등 실물 자산과 연계된 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와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이 존재하고 있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4년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3.1조 달러로 한국의 110억 달러의 300배 수준임
-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 시장을 통한 미국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해외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 금융 회사 및 투자자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선진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국내 금융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예컨대 중국 투자자가 미국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에서 매매하거나 한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것이 용이해져 동북아 지역의 금융 투자 수요를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임

② 부정적 효과

- 자금 중개 기능 왜곡 심화 : 우리나라는 기업 금융 활성화 여건이 취약해 선진 기업금융 기법 도입에 한계가 있어 미국 금융 회사들이 소매 금융에 치중하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순환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신용평가 체제 미흡 등 기업 금융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valuation)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때문에 외국 금융 회사들이 증권인수(underwriting)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은행들이 기업 금융 보다는 소매 금융에 치중⁴⁾하면서 시중 자금이 성장과 고용 기여도가 높은 기업 부문으로 배분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한미 FTA 체결로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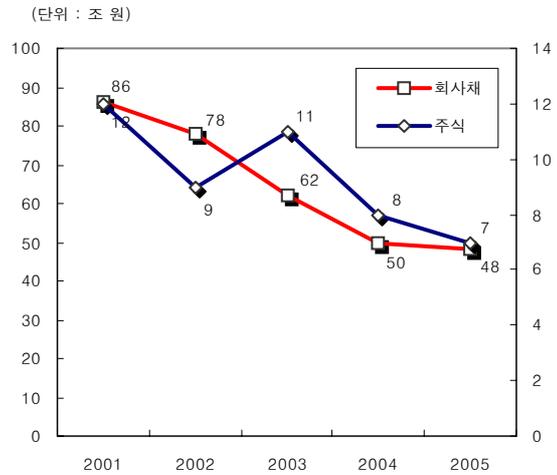
4) 외환위기 전후 30%대였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6년 3월 말 현재 약 50%로 높아졌고, 가계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157조 4,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임.

< 일반은행 원화 대출금 >



자료 : 금감원.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



자료 : 재정경제부.

[보론] 취약한 국내 기업신용평가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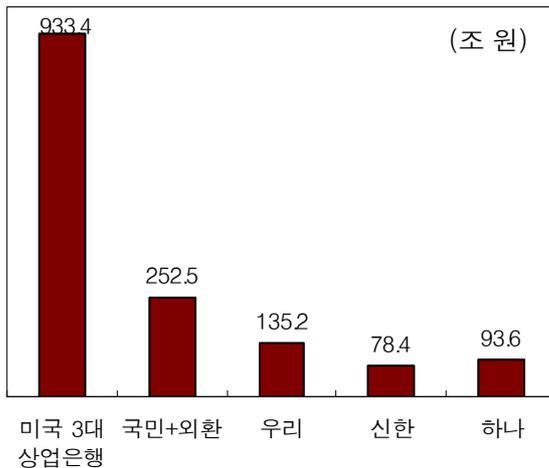
- 국내 기업신용평가가 낙후되어 있어 주식, 회사채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금융회사들의 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 중개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는 선진화된 업체가 없어 기업의 신용정보 풀(pool)이 미흡함
 - 국내 최대 기업 CB인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위한 부수 업무 수준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임⁵⁾
 - 한편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회사채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은 350~360개로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1,600개의 21.9%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수준임(업계)
 - 이에 따라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황동원, '국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의 성공 조건', 한국경제주평, 2006. 1. 17.

5)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 7.

- **국내 금융 산업 기반 훼손** : 국내 금융 회사들의 경쟁 열위로 인해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에게 국내 금융 시장이 크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따르는 국내 금융 산업의 부실화 우려도 증대
 - 미국의 대형 금융 회사들은 국내 금융 회사들에 비해 자산 규모, 자본 조달 비용, 상품 설계 능력, 시장 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 있음
 - 특히 한미FTA 체결로 금융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 업종 간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 상품 유형 등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금융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경쟁 열위에 있는 국내 금융 회사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과도한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국내 금융 회사들의 부실이 심화되고 경영의 안정성도 크게 악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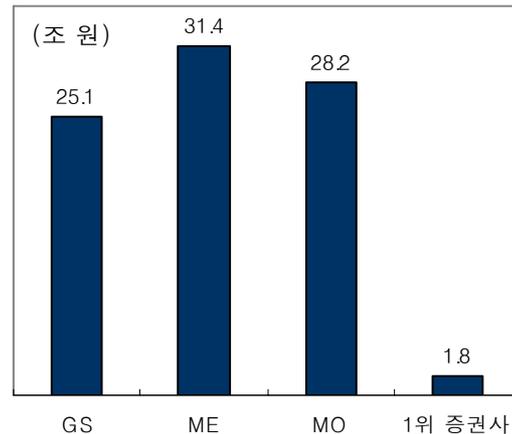
<은행권 자산 규모 비교>



자료 : FRB, 금감원.

- 주 : 1) 미국 3대 상업은행 자산규모는 평균치임
- 2) 2005년 3월 기준임.

<증권회사 자기 자본 규모 비교>



자료 : 재정경제부, 금감원.

- 주 : 1) GS(Goldman Sachs), ME(Merrill Lynch), MO(Morgan Stanley)
- 2) 2004년 기준임.

- **국부 유출** : 한미 FTA 체결은 투자, 고용 등을 수반하지 않는 미국 금융 회사의 한국 시장 잠식과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증가 등을 유발해 국부 유출 논란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 한미 FTA 체결로 상업적 주재 없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우 미국 금융회사들의 투자 및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국내 금융 시장 진출이 급증하면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회사의 적대적 M&A 증가도 예상됨
 - 만일 법률시장의 개방이 함께 진전될 경우 미국의 법률 회사들이 집단소송 등을 부추겨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도 빈번히 발생할 것임
 - 멕시코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인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30.9%에서 2003년말 현재 83%로 급증하였으며, 2003년말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 은행은 Banorte 은행이 유일함
- 금융 소비자 피해 : 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경우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예컨대 불공정 공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금융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시사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금융 산업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음
- 미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전폭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 시장 개방으로 불가피한 시장 잠식 즉, 개방에 따르는 수수료는 지불하되 선진 금융 기법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시장 개방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함

- (정책 과제) 기업 신용평가체제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금융 활용 여건 확충, 출총제·금산법 등의 기업 규제 폐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금융 감독 기능 제고 등이 선결 조건임
 - 먼저, 선진화된 신용평가회사 육성 등 기업 신용평가체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pricing) 책정을 유도하여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이 국내 기업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는 기업 신용평가체제가 미흡해 자금 제공자(금융회사)나 수요자(기업)가 자본 시장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자금이 순환되는 것이 제약됨
 - 특히 담보력 등이 취약한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는 기술력 및 성장성을 적절하게 평가받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외국의 선진 금융 회사들이 이들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출총제, 금산법 등 국내 금융 산업 특히, 증권 보험 회사들의 대형화를 가로 막는 규제를 폐지하여 대내외 금융 회사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함
 - 대기업 계열이 중심인 증권사, 보험사의 경우 출총제, 금산분리 원칙 등으로 대형화 또는 자본 확충을 통한 자산운용 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애로가 있음
 - 주식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시장 감시 기능이 확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도 동일한 수준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에 앞서 금융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독 체제 확충과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를 개선하여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됨^{HRI}

황동원 선임연구원(3669-4181, dhwang@hri.co.kr)